

한국당 ‘국회 파업’ 장기화 광주·전남 현안사업 ‘발목’

광주형일자리·세계수영대회 관련법안 장기 표류
도 노후산업단지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 등 지연

국회 파행이 장기화되면서 광주시와 전남도의 현안 사업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세계수영선수권대회와 광주형일자리 등 지역 최대 현안들의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선 조세특례제한법이나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 처리가 시급한데 국회가 2주 넘게 개점휴업 하면서 관련법 개정이 지연되고 있기 때문이다. 30일 광주시와 전남도에 따르면 세계수영선수권대회 등 지역내 굵직한 현안 사업을 뒷받침할 관련 법 개정안이 국회에 장기간 계류중이다.

지난해 11월 더불어민주당 송갑석(광주 서구갑) 의원은 수영대회로 인해 발생하는 외국인세와 소득세에 대해 법인세와 소득세가 면제되도록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 세법은 광주세계수영대회로 인해 발생하는 외국인세와 외국인의 소득에 대해 법인세와 소득세를 부과하고, 수영대회 조직위원회가 이를 대납하도록 명시했다.

국제수영연맹과 각국 수영연맹의 수익으로 발생하는 법인세는 19억5천만원으로 예상된다. 이는 개최권료, 방송신호제작비, 후원업체 등의 수익금 444억원에 대해 세율 2-5%를 적용한 것이다.

또 소득세는 외국법인의 위원, 임직원, 선수, 감독, 심판 등에 대한 상금, 체제비, 항공료, 심판수당 등에 따른 135억원에 세율 22%를 적용해 29억6천여만원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의 경우 특례 적용으로 법인세와 소득세가 모두 감면되면서 개최도시의 재정 부담을 덜어준 바 있다. 때문에 광주수영대회에서도 조세 면제가 시급한 상황이다.

하지만 여야 갈등으로 국회가 장기 파행하면서 법안 심사 일정이 불투명한 상태다. 또 광주형일자리와 관련한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일부개정안도 현재 계류 중이다.

개정안에는 ‘상생형 지역일자리’에 대한 개념을 정의하고 사업의 효율적 지원을 위해 심의회 운영, 선정, 행정·재정적 지원근거 조항을 신설했다. 또 지자체 또는 출자출연기관이 상생형 지역일자리 사업에 참여할 경우 지방출자출연에 관한 법률에 적용되지 않도록 했다.

이는 지난 1월 문재인 대통령이 광주형일자리의 성공과 전국적인 확산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함에 따라 법적 인 제도 및 지원체계를 구체화한 것이다.

개정안 처리가 지연될 경우 지자체 출자출연법 적용한 계약, 회계, 자금관리 등의 제한으로 광주시의 투자유치에 어려움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읍 상반기 내 광주 완성차 합작법인 설립을 위해선 법안 통과가 시급한 상황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광주형일자리 합작법인을 설립하는 과정에서 지자체 출자·출연기관의 사업 참여로 출자출연법에 따른 부분은 문제가 없을 것”이라며 “여러 지자체에서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는 사안인 만큼 별다른 문제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남도는 국회 파행으로 오는 6월 중 예정된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의의결의 차질을 우려하고 있다. 노후산업단지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정부안 20억원 반영), 노후 경유차 폐차 지원(정부안 10억원), 해남 현산천 노후교량정비사업(정부안 15억원) 등이 전남의 시급한 현안들로 정부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다.

이밖에 산업위기지역으로 지정된 영암의 알마미노 소형선박 건조지원 시스템 구축(10억원), 레저선박 부품 기자재고급화 기술개발(14억원) 등 사업들도 예산 반영이 필요하다.

전남도 관계자는 “민선7기 2년차에 꼭 필요한 사업에 대한 당위성을 국회 및 기재부에 설명해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임채만기자
/김다이기자



빗속 실종자 수색 한국인 관광객들이 탄 유람선 침몰사고가 발생한 헝가리 부다페스트 다뉴브강에서 30일 오전(현지시간) 비가 내린 가운데 실종자 수색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연합뉴스

헝가리 다뉴브강 유람선 충돌·침몰 여수 시민 3명 등 한국인 26명 사망·실종

관광객 등 35명 탑승, 7명 구조...정부, 신속대응팀 급파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한국 관광객들이 야경을 보기 위해 빌려 탄 유람선이 다른 선박과의 충돌로 침몰하는 참사가 벌어졌다.

▶관련기사 6면

이 사고로 한국인 33명 가운데 관광객 7명이 숨졌고, 현재 19명은 실종상태다. 여수 주민은 모두 4명이 승선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남도는 30일 사고 선박에 여수 출신 일가족 4명이 탑승, 이 중 황모(49)씨가 무사히 구조되고 나머지 3명은 실종 또는 사망자에 포함돼 있어 희생자 가족을 위로하고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종선 전남도 도민안전실장은 “먼저 피해자 가족들에게 상황을 전달하고, 이들이 원할 경우 여행사 등과 함께 여권 발급, 항공권 및 숙소 확보를 적극 지원 하는 등 도민들이 무사히 귀국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여수시도 가족들에게 연락을 취하는

한편, 후속 대책 마련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 김모(43)씨 등 3명은 실종돼 연락이 닿지 않고 있다. 이들 여행객들은 자매와 딸, 친인척 관계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모(45·여)씨와 김씨의 딸(21), 김씨의 여동생 김모(42·여)씨 등 3명은 생사가 확인되지 않고 있다. 황씨는 김모 자매의 고모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해당 여행사는 여수 출신 여행객의 가족들에게 연락해 헝가리로 출발할 가족들의 명단을 확보하고 있다.

전날 발생한 이 사고는 다페스트 다뉴브강을 운항하던 ‘허블레아니’(헝가리어로 ‘인어’) 유람선이 헝가리 의회와 세체니 다리 사이에서 다른 유람선과 충돌한 뒤 침몰했다. 최근 헝가리에는 많은 비가 내려 다뉴브강도 수위가 평소보다 높았던 것으로 알려졌으며, 건조된 지 70년 된 노후 선박인 것으로도 알려졌다.

이에 부다페스트 재난관리국은 현장



에 소방대원 100여 명과 함께 레이더스캔 등의 특수장비를 투입해 구조작업을 벌이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헝가리 정부와 협력해 가용한 모든 자원을 총동원해 구조 활동을 할 것을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으로 부터 상황을 보고받고서 이같이 언급했다고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현지에 신속 대응팀을 급파하도록 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강경화 외교부 장관을 본부장으로 하는 중앙대책본부를 즉시 구성할 것, 국내에 있는 피해자 가족과 연락을 유지하고 상황을 공유할 것 등을 지시했다.

한편, 침몰한 유람선에 탑승한 인원은 총 35명으로 한국인은 여행객 30명, 인솔자 1명, 현지 가이드 2명 등 총 33명으로 파악됐다.

/최환준기자
/여수=김진선기자

광주 공시지가 10.98% 상승...전남 6.77% ↑

남구 13.86% ↑ ‘최고’...충장로2가 상가 가장 비싸

광주시와 전남도는 2019년 1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31일자로 결정·공시했다.

올해 광주지역 개별공시지가는 전년보다 평균 10.98% 상승했다. 이는 전국 평균 상승률 8.03%에 비해 높은 수치다. 자치구별로는 남구 13.86%, 광산구 13.64%, 동구 10.09%, 서구 9.84%, 북구 7.38% 등 순이다.

표준지를 포함한 관내 최고지가는 동구 충장로2가 우체국 맞은편 상업용 대지로 ㎡당 1천220만원이었으며, 최저지가는 광산구 어등산 인근 임야로 ㎡당 700원이었다.

광주시는 그동안 실거래 대비 낮게 평

가된 토지의 공시지가 현실화와 개발지역 등의 지가 상승에 따라 개별공시지가가 상승한 것으로 분석했다.

광주시 개별공시지가 열람은 일사편리 광주 부동산정보조회시스템(kras.gwangju.go.kr/land_info)과 토지의 관할 자치구에서 가능하다.

전남지역 개별공시지가는 지난해보다 6.77% 올랐다. 이는 전국 평균(8.03%)보다는 낮은 수준이다.

여수 학동 중심 상업용지가 ㎡당 418만원으로 가장 비쌌다. 가장 싼 곳은 진도군 조도면 진목도리 임야로 ㎡당 157원에 불과했다.

시군별로는 장성군 11.91%, 해남군 1

0.69%, 담양군 9.34% 순으로 높은 상승률을 보였으며, 영암군은 3.21%로 가장 낮았다.

주요 상승 원인은 장성군의 경우 나노산업단지 조성과 연구개발특구 지정 등의 영향을 받았다.

해남군은 산이연 일대 21㏊에 달하는 서남해안 관광레저도시 구성지구의 개발 추진으로, 담양군은 첨단문화복합단지 사업 추진과 광주 연접지역 가격 상승 등으로 올랐다.

지가 결정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해당 자치구, 시·군에 7월1일까지 이의 신청하면 된다.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 양도소득세, 상속세 및 토지 관련 부담금 등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된다.

/최권범기자

광주형일자리 캠페인

광주형 일자리

광주형 일자리 성공으로 노동이 존중받고 기업하기 좋고 일하기 좋은

“노사상생도시 광주”를 실현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
GWANGJU CITY